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쟁점 법안 놓고 '기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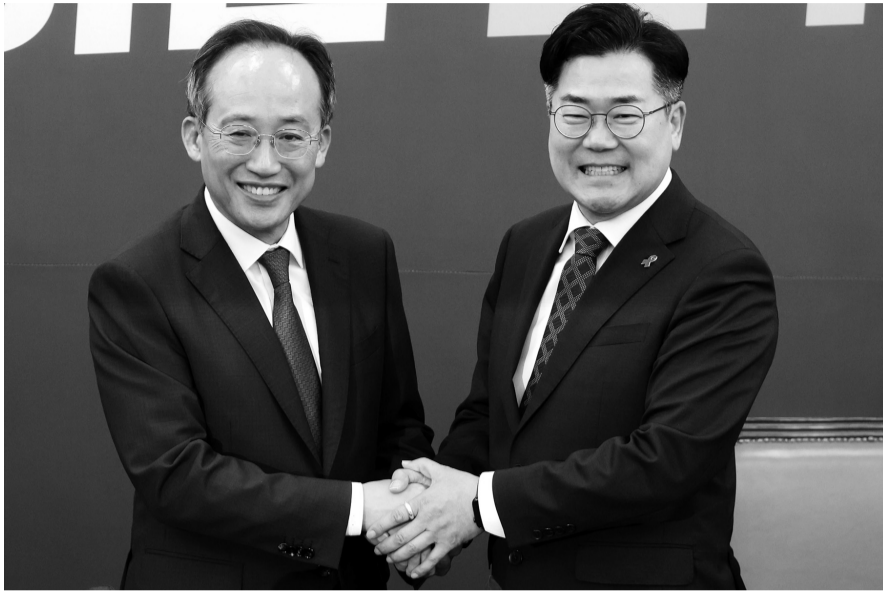
친윤 추경호-친명 박찬대 상견례
“여야 긴밀하게 소통해 문제 해결”
채상병 특검법·민생지원금은 이견

대구경북(TK) 출신 친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강성 친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상견례를 했다. 두 사람은 회동 초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22대 국회 원구성과 각종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는 기싸움을 벌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30여분간 취임 인사를 나눴다.

박 원내대표는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간격 차이로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 산적인 현안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는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자주 만나서 얘기하자. 일주일에 한 번은 식사하고 얘기해야 하지 않나하고 속 터놓고 말하다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시

추 원내대표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지는 게 아니라 횟수는 그보다 자주일 수 있다. 최소한 식사는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했다)”고 화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인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추 원내대표를 환영했다.

TK 출신인 추 원내대표와 인천이 연고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맞아 자신의

경북 안동과 인천 연고를 강조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추 원내대표도 박 원내대표와 연고를 언급하며 소통을 강조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소통과 협력을 언급하면서도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전환 전 모두발언에서 “야당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산적인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협치와 소통이 중요하다. 현안을 풀어나가는 인식, 방향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이 부분을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지 기대도 크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경기침체가 심각하다.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이다. 시급한 민생회복 대책이 필요한데 집권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을 기대한다”며 “원내대표 발언에서 ‘추경 편성 협조요청에 호’하고 대답해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때문에 많이 긴장(국면)인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수용을 요구하는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라인 사태가 심각하다. 경제 주권 사안인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며 “국회도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야 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원구성도 저도 추 원내대표도 서로 강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원구성이 원만하게 협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서 정말 감사드린다. 국회 보좌진들로부터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은, 일하기 좋은 의원으로 평이 자자하다”며 “그래서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크다. 앞으로 잘 모시고 소통하고 국민께서 바라는 의회정치의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인사 차원에서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훑 들어오고, 또 내 견해를 훑 이야기하고 가면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간을 좀 가지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저를 원내대표로 뽑은 숨은 뜻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박 원내대표 고향이 안동이고 경북이니까 추경호가 부족하지만 대구 경북 출신이면 소통이 잘되지 않나 숨은 뜻이 있지 않나 싶다”고 소통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원내수석부대표를 뽑을 때도 박 원내대표가 인천이니까 배준영 의원을 특별히 모셔서 같이 하자고 했다”며 “협상하면서 제일 첫번째는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선 소통할 수 있는 모양, 채널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최대한 빨리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담당할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하고 나섰다.

김수경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윤 대통령의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고, 대통령실 내에서도 관련 문제를 전달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저출생수석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수석실 구성은 출발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저출생수석실은 출발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며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정해 언제까지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온 것은 아니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책임자를 찾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수석실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수석이 신설될 경우 대통령실은 ‘3실장 8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저출생)’ 체제가 된다. 저출생수석실 설치와 함께 저출생부 신설 역시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오지현 기자



‘채해병 특검’ 촉구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13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함께 채해병 특검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

광주시 올해 첫 추경 8727억원 증액

시의회, 시·교육청 1회 추경안 확정
5·18 왜곡 대응 비용 등 예산 반영

광주시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확정 의결돼 기존 예산보다 8727억원(12%p) 늘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당초 예산 6조942억원보다 8727억원(12.6%p) 증액한 7조7770억원 규모의 2024년도 광주시 1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확정예산 7조1101억원보다 6669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시교육청 예산도 추경심의를 거쳐 본예산 2조6817억원 대비 2982억원(11.2%p) 늘어난 3조55억원이 편성됐다. 광주시가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뒤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 전입금 3087억원 중 604억원은 다음 추경 때 편성하기로 했다.

5·18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5·18

규모의 시민 친화공원(성역화) 사업 2억 8000만원, 5·18 역사 왜곡 대응 지원 비용 7000만원 등은 예산 심의에서 반영됐다.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예산 20억원과 광주송정역~상무지구 구간 상무대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2억원도 증액됐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5000만원을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했다.

시교육청 예산 중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위한 학내 전산망 고도화 사업 100억원은 사전 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에게 지급할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122억원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학부모·학생·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은지 기자

“5·18 헌법 수록 개헌 즉각 추진해야” 한 목소리

광주 당선인 8명, 공동 간담회
“22대 국회서 원포인트 개헌을”
개헌 추진 당위성·가치 등 제시

민형배 국회의원과 박군택·안도걸·양부남·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등 광주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대 국회가 개헌하는대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간담회를 열고 개헌 추진의 필요성 및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고견을 듣고 본격 여론조성에 나섰다.

간담회는 백학순 김대중학술원 원장이 좌장으로 사회를 맡고,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추진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를 맡았

다.

간담회 토론자로는 이재의 전 5·18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과 정해구 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각각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추진의 당위성 및 5월정신의 헌법적 가치와 의의 등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는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를 이끌어간 이른바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의 첫 번째 원칙인 진실의 원칙에 호응하면서 마지막 원칙인 ‘기념과 정신 계승의 원칙’을 완성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18은 우리 헌법에 추상적으로 표현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가장 뚜렷하게 구현한 역사적 실체이며, 그런 점에서 헌법의 모든 가치와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된다”면서 “말 그대

로 우리 헌법이 상징하는 인간의 숭고한 모습(인간은 존엄하여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 구현된 사건이다”고 정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의의 전 5·18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은 “5·18은 헌법의 이념적 지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11~36조) 회복을 위한 투쟁으로서 지난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법적·역사적 평가가 완성된 사안으로 ‘5월정신의 헌법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실무 추진을 맡은 정진욱 당선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5·18 정신의 헌법수록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불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을 희생시킨 지난 권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흐트러진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